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 진행순서
 - 시민조사단 발언
 - 조사결과 발표
 - 투기 의심 사례 대전광역시/대전경찰청 접수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 TEL.042-331-0092,FAX.042-252-6976

www.cham.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1년 4월 19일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정의당 대전시당(간사 설재균, 010-3583-8786,
042-331-0092,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은희, 010-8808-8581)

제 목 /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시민조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 1.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이 연대한 조직입니다.
3. 시민조사단은 3월 22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지구)를 집중 조사지역으로 삼아 2259개의 해당지역 필지 소유자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6대, 7대, 8대 의원(자치구의원, 시의원) 명단 8,500여명을 대조하였습니다.
4.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현직 공직자 명단대조를 진행했고 동명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거래 시기, 토지의 지목, 토지의 규모에 따른 농지법 위반 의심 및 투기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5. 4월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광역시 합동조사단의 동명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내용 :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발표에 따른 시민조사단 1차 결과발표”

- 시민조사단 발언
- 조사결과 발표
- 투기 의심 사례 대전광역시/대전경찰청 접수

-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10:00시 ~ 10:30분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설재균(010-3583-8786, 042-331-0092)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희(010-8808-8581)

2021. 4. 19.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첨부자료. 1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이 안산첨단국방과학 단지 부근
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 대조를 통한 결과임 -

1. 조사 개요

- (방 향) 개발사업 지역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및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의심 사례 검토
- (시민조사단 구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시민제보 센터 운영, 현장조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 등
- (기 간) 2021.03.22 ~ 2021.04.16
- (대 상)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공무원(5개 자치구 포함),
대전 도시공사 임직원, 대전광역시의원(6대,7대,8대), 5개구 자치구
의원(6대,7대,8대) 등 8,500여명 및 LH직원
- (범 위) 안산첨단과학국방단지 인근 / 2,259필지
- (방 법)
 - 대전시, 5개 구, 대전도시공사, 시 의회, 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명단 확보
 -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된 지적도를 통해 필지 확보
 - 안산지구 필지 2,259개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주 확인
 - 공직자 명단과 토지대장 소유자의 일치여부 확인

- 2,259필지 중 투기 의심 토지(토지 쪼개기, 토지방치, 불법전용 의혹 등)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심층검토

2. 조사 결과

-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 확인(시민조사단에서는 현직 공무원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요청)
-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 확인(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제보)
- 매매 시기, 계약 면적, 필지 쪼개기, 불법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농지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투기의심 31필지 확인

구분	대전광역시 공직자 동명 / LH직원 동명	농지법 위반 / 투기의심
인원	28명/9명	27명
필지 수	45필지/21필지	31필지

3. 요청 사항

1.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공무원 동명 중 현직공무원과 일치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와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의 투기 조사 확대를 요구합니다.
4.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해당지역 필지 소유 공무원의 농지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5.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 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6. 조사 시점의 공무원, 즉 퇴직공무원들 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7. 시-구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구역들에 대한 실정법(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위반 단속을 위한 관할 부서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리감독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첨부자료. 2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남가현 위원장 발언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 대전시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5개 자치구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사단은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를 했던 공무원 17명 모두에게 시세차익을 보긴 했지만 토지 매입시점에 관련 부서에 없었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은 없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한 명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 고발조치 했던 사람으로 특조단의 실적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대전시는 공무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대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 달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에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는커녕 전화 한 통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경찰의 내사결과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결국 대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따릅니다.

이번 대전시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전시민들은 정말로 대전시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맹탕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투기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전시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전시의 의지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신고센터에 전화하신 제보자 한 분은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을 제보하려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현재는 퇴직상태라 대전시가 신고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더 열심히 요청하고, 신고받은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신뢰를 회복해도 모자랄 판국에 대전시는 조사방법의 한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사방법의 한계는 시민 조사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부지의 필지 목록과 공무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조사단은 일일이 필지와 공직자 명단을 정리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민조사단의 노력에 이제 대전시가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조사 해야합니다. 차명투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조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문서 유출과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투기에 활용되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 합동조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